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08. 15. (토요일)

**“우주 다음은 바다”... 글로벌 심해 채굴 경쟁과 국제사회의
딜레마**
**- 이차전지 핵심 광물 둘러싼 국가 간 자원 경쟁, 시험대에 오른
국제 해양 규범 -**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급성장으로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수요가 폭증하면서 각국의 시선이 태평양 심해로 향하고 있다.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와 기업, 해양 생태계 보호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그리고 상업 채굴을 둘러싼 국제적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국

제해저기구(ISA)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심해 광물을 둘러싼 세 가지 이해관계

현재 국제 해역에서의 상업용 심해 채굴은 국제해저기구의 공식적인 채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금속 수요가 급증하면서 엄격한 규제 아래 개발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 가지 거대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첫째는 자본과 자원 안보 확보를 꾀하는 국가 및 기업, 둘째는 상업적 채굴이 초래할 생태계 영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촉구하는 국제 환경단체, 셋째는 168개 회원국 사이에서 환경 보호 의무와 상업 채굴을 위한 엄격한 규정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국제해저기구다.

지정학적 역학: 핵심 광물 공급망과 각국의 딜레마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중국은 심해 광물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사 및 연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제 규칙 마련 이후 심해 채굴을 가장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중국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바누아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선부른 개발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방의 이러한 움직임 이면에 "중국의 핵심 광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해저기구 회원국이 아닌 미국 또한 하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심해 진출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의 과제: 자원 개발 수요와 글로벌 규범의 충돌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을 관리해온 글로벌 규범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캐나다 개발 기업과 손잡은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2021년 발동시킨 이른바 '2년 룰'은 현행 제도

의 맹점을 드러냈다. '2년 룰'에 따라 국제해저기구는 기한 내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나우루 측은 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얻었다. 이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자원 개발 수요와 국제 해양 규범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망 및 국제사회의 방향성

결국 심해 채굴을 둘러싼 작금의 갈등은 단순히 자원 확보를 넘어 인류가 지구의 최후 미개척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심해저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한 국제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 기준과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송윤진, 장서연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HLMUN